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특자도 범국민추진협 추진단 출범	1
江原日報	27면	“강원특별자치도 신속한 의사결정·특례 발굴에 전력”	2
江原日報	03면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이기찬 부의장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교육감 향해 도정 질문	3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농림수위·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 간담회	4
경기인터넷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사)한국후계농업경영...	4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道·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5
KBS 춘천	온라인	잇따르는 지원 조례안, ‘실효성·적절성’ 논란	6
강원도민일보	03면	"28년 방치 영월 상동광업소 폐사택 정리해야"	7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심재국(원주) 평창군수·최종수(평창)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8
江原日報	27면	[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고성)	8
강원도민일보	01면	"바이오헬스 산업·공공기관 유인 주력 필요"	9
강원도민일보	12면	지방혁신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교육특구 경쟁 우위 선점	9
강원도민일보	12면	농수산·천연물 바이오산업 포석 '새 수출상품' 발굴 절실	10
강원도민일보	04면	전교조 강원지부 '기초학력보장 조례안' 제정 중단 요구	11
강원도민일보	13면	도청 강릉2청사 시대 '주문진 도약' 기대	12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과도한 용역 과감히 줄인다	12
江原日報	16면	“홍천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 지켜라”	13
강원도민일보	14면	동해시 삼화사 옛터 국가 사적 지정 나선다	13
江原日報	02면	춘천지법 신청사 고은리 이전 결정	14
東亞日報	16A	원주에 2500석 오페라하우스 들어서나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산림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제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당 현수막 난립, 시민 화났다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집값 하락 우려 산사태 취약지 정보 공유 안 하다니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경계심 이완 땀 더 큰 화 불...	19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02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출범식이 20일 춘천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추진단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호

강원특자도 범국민추진협 추진단 출범

김천수 단장 등 41명 구성
본지 공로 인정 감사패 수상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이 20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범도민 여론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춘천세종호텔에서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총 41명으로,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이 단

장을 맡았다. 부단장엔 정준화 양양군 번영회장이, 자문위원장엔 조창진 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김진태 지사는 인사말에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강원도민이 투쟁해 얻어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벌써 3차 개정안이 어떻게 되냐 기대와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추진단 위원 여러분의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조직권과, 교육자치권, 동해안권 발전 특례 등을 착실히 준비해 3차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추진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 등 특례를 통해 학생들이 강원도를 찾아오는 특별한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추진단 위원분들께서 단합된 힘을 모아주시면 3차, 4차 개정안도 여야없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천수 추진단장(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은 “범국민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강원도민과 정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를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현안을 선제적으로 이끈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지원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김덕형

“강원특별자치도 신속한 의사결정·특례 발굴에 전력”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민 의지·역량 결집을 위한 기구인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이 2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출향인사와 오피니언 리더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빠른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 중 40명으로 재구성됐다. 추진단장은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이 맡는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 범추협은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강원자치도 출범 유공 기관과 개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투쟁 끝에 특별법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추

도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춘천서 출범·활동 돌입
단장에 김천수 도민회중앙회장… 역량 결집 강화 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출범식이 2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노용호 국회의원, 김천수(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추진단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진단 구성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조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끊이지 않고 화해서 나아가겠다”며 “특별자치도 도민의 관심도 높다. 지금부터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올 5월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범국민추진협의회원들은 사발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셨다”면서 “범추협의 열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으로 활동하게 될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처럼 기분 좋았다.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단을 새로 구성했다.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홍보 등 현안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江原日報

2023 07 21 ()
03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이기찬 부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갖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기찬(국민의힘·양구) 도의회 부의장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03

도교육감 향해 도정 질문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이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20



도의회 농림수위·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20일 춘천 한 식당에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 07 2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사)한국 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이은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인터넷신문=이은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7월 20일 제 321회 임시회 회기 중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개최,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3 07 21 ()

03

江原日報

도의회 “道·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임시회 본회의서 개선 촉구

의무 고용률 못 지켜 분담금 내
도 작년 2억·교육청 5년간 75억
수의사·수의직 인력 부족도 지적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내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이 개선되지 않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관희(국힘·춘천) 도의원은 20일 열린 강원자치도의회 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강원자치도는 2021년 1억3000만원, 2022년 2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고 있고 도교육청은 5년간 75억원이 넘는 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도내 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일섭 도 행정국장은 “장애인들이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점수 미달도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충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고 신경호 도교육감 역시 “지원자가 없고, 합격이 안 되는 등 힘든 상황이지만 무엇이 최선인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년 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도와 도교육청 모두 같은 답변뿐이고 개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명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길로(국힘·영월) 의원은 본보에 지난달 보도된 ‘수의사들 한 우·돼지 기피…축산업 어찌나’, 지난해 보도된 ‘가축 질병 잇따르는데 방역인력 대부족’ 기사를 거론하며 도내 대동물 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수의직 공무원 수당 인상, 도

내 수의대와 협약을 통한 의무근무 제도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말씀하신 내용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강원자치도뿐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기찬 부의장은 이날 강원외고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에 따른 문제를 따졌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강원외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강원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1,000명 중

외고를 유지했을 때 올 아이들이 300명, 일반고로 전환되면 올 아이들이 600명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라며 “2018년도 자료이며 설문 대상 73%가 일반고 입학 희망자로, 분석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나 신 교육감은 답하지 않았다.

이 부의장은 이어 “강원외고라는 훌륭한 자원이 농어촌 자율학교로 바뀌는 데 아쉬움이 많다. 향후라도 비슷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07 20 ()



잇따르는 지원 조례안, '실효성·적절성' 논란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각종 지원 조례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의 적절성부터 조례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로 강원도 재정난이 심각한데 세금으로 지원되는 영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발의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내연차 정비업체가 친환경자동차까지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체 한 곳당 150만 원, 종사자 1명당 교육비용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기하/강원특별자치도의원 :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가져가서 수리를 못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정비업체와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한 해에만 37억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정 업종만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발의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보상 해주는 보증상품의 가입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임미선/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분들을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본다.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지원사업을 이미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사업 대상자를 빼면, 해당 조례의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조례안'이 잇따라 나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의원들이 실적보다도 주민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탄탄한 조례 준비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03

“28년 방치 영월 상동광업소 폐사택 정리해야”

도의회 4차 본회의 도정질의 지적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영월군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영월 상동광업소 폐사택 등 수십년째 방치된 건물을 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윤길로(영월) 의원은 20일 도의회 제 3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영월 상동광업소 폐사택을 언급하며 “1978년도에 처음 건립됐고, 28년째 방치 중”이라며 “건물 잔재가 바람에 날리기라도 하면 지나가는 행인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광해광업공단, 폐광지 4개 시, 군이 실무 협의를 통해 사유재산 보상 등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올해 더 늘었다”며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윤길로 의원 박관희 의원 이기찬 의원

식의 도덕적 해이도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금액은 2021년 24억원, 2022년 19억원, 2023년 21억9000만원 등 최근 5년간 총 75억원에 이른다.

이기찬(양구) 의원은 “강원외고는 도의 교육적 자산임에도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발견됐다”며 “이미 5년 전 실시된 여론조사를 여론으로 반영하고, 관계자 회의 결과 등을 왜곡했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3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2일 오후 7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FC 홈경기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6

심재국(원주) 평창군수·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1일 오후 6시 30분 진부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진부야 시장 및 주말장 개장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8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은 21일 오후 5시 고성군 현내면 초도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초도성게축제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7 21 ()
27

제7회 초도성게축제

◇김용복도의회농림수산위



원장(고성)은 21일 오후 5시 고성군 현내면 초도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초

도성게축제에 참석.

2023 07 21 ()

01

강원도민일보

“바이오헬스 산업·공공기관 유인 주력 필요”

특자도시대-강릉발전전략포럼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 주목

천연물바이오 산단 확대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개막 및 동해안 글로벌본부(제2청사) 개청을 맞아 강릉과 동해안이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 디지털 관광서비스와 바이오 헬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국제대학과 공공기관 유인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릉시와 강원도민일보 공동 주최로 20일 강릉원주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릉발전전략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강릉이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를 주목하면서 미래 맞춤형 특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을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강릉시의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강원특자도시글로벌본부 개청(24일)을 앞두고 관광+산업 투트랙 발전 방안을 새롭게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훈 한양대 교수(전 한국관광학회 회장)는 관광 분야 주제발표에서 “강릉이 해양치유형, 마리아형 등 핵심 해양관광산업군을 극대화하면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해양관광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산업 분야 발제에서 “천연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고, K-연어 스마트 양식 국산화 사업이 강릉·양양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취약한 제조업 발전에 청신호”라며 △천연물바이오산

단 확대 △AI와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의 전략을 주문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시대 동해안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은 북방진출의 거점지이면서 해양관광에 특화된 지역이고,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으로 발전 기대도 크다”며 “강릉의 경우 역사·문화·스포츠 등 특화 자산 활용도를 높이면서, 환동해권 국제도시 허브(HUB)화, 국제대학교, 의료관광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유인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홍식 강릉원주대 교수의 사회로 김종욱 강릉부시장, 심오섭 도의원, 윤희주 시의원, 강신수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처장,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최근표 강원도립대 기획홍보처장 등이 논의를 전개했다.

홍성배

▶ 관련기사 12면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2



강릉시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강릉시의회가 후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개막 제2청사 개청-강릉발전 전략 포럼'이 20일 강릉원주대 산학협력관에서 개최됐다.



강릉시·강원도민일보 공동주최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릉발전전략포럼'이 20일 강릉원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지방혁신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교육특구 경쟁 우위 선점

강릉발전 전략 포럼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가 개막하고, 동해안에 글로벌본부(제2청사)가 새롭게 개청하는 대전환기를 맞아 강릉과 동해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마당이 마련됐다. 20일 강릉원주대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릉발전전략포럼'에서 주제발표와 토론 참석자들은 광역 교통망이 줄지어 확충되고, 글로벌본부가 개청하는 '기회의 시대'를 맞아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관광 선도도시로, 바이오헬스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산업물류 중심지로 관광·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릉시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강릉시의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2청사 개청(24일)을 앞두고 열려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사회=박홍식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기조강연=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주제발표=이훈 한양대 교수(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석중 박사(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2

주제발표2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강릉미래산업 육성 방향

농수산·천연물 바이오산업 포석 '새 수출상품' 발굴 절실

김석중 박사(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내 수출 감소세 신산업 연계 필요

강릉의 산업구조는 1,2차산업 비중이 강원도 평균보다 낮는데 반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GRDP 변화를 고려할 때 연평균 성장률이 3.1%로 강원도 평균(2.4%)보다 높고, 강원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7.7%에서 2020년 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산업은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시멘트 등의 비금속 광물, 기타기계장비 등 3개 산업으로 압축된다.

수출산업의 경우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도는 27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강릉지역은 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가 감소, 신산업 전략과 연계한 새 수출상품 발굴 육성이 절실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기치로 인구 200만, 지역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강릉시산업은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농림수산분야), 바이오헬스, 최첨단 반도체 소재, 친환경 에너지(제조업 분



야),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서비스업 분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 자원의 국산화 및 K-연어 스마트산업화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강릉에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양양에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수산식품 분야에서 돋보인다. 향후 스마트팜 조성 과 농업의 데이터화로 보폭을 확장해 고품질 감자 생산 등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정면 일원 28만 평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ICT 신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포석이다. 향후 바이오 산단을 100만 평 규모로 확대하고, AI와 자율비행 분야를 비롯 메타로드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차별화하는 것도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중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확보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산업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의 과제다.

정리=이연제
토론 상보 24일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04

전교조 강원지부 '기초학력보장 조례안' 제정 중단 요구

엄기호 도의원 “학생 기본권 취지”

전교조강원지부가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고, 도교육청도 현장 교사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제, 이는 검사 결과를 간접 공개하려는 의도”라며

“교육감이 정책을 따르는 학교와 아닌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포상을 통해 학교장을 길들여 사실상 정책 추진을 강제하는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중단과 학생 진단·지원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배양해주자는 취지”라며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등은 서열화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조례 내용에서 제외했다. 기초학력을 진단해 학생을 지원하는 게 학생 기본권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3

도청 강릉2청사 시대 '주문진 도약' 기대

24일 도립대 청운관 내 개청
3개국·4개 사업소 287명 근무
민원편의 향상·지역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오는 24일 강릉 주문진 지역에 글로벌본부(도청 제2청사)가 개청돼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본부는 강원도립대내 청운관에 입주하게 되며 현재 청사 리모델링이 마무리돼 사무기기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본부에는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개국과 총괄기획관을 비롯해

DMZ박물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등 4개 사업소가 운영되며 정員 287명이 근무하게 된다.

총괄 기획관에는 종합민원실이 설치돼 각종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한다. 미래산업국은 에너지산업과와 디지털산업과, 자원산업과, 관광국에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유틸리티설과, 설악산악도추진단이 편성돼 있고, 해양수산국에는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양식산업과가 운영된다. 지난 1967년도 동해출장소에서 2012년 도 환동해본부로 승격돼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환동해본부는 5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 활동하게 된다.

글로벌 본부가 개청됨에 따라 직원들의 거주는 물론, 민원인들이 주문진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여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은 거

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며 제2청사 개청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조대영 시의원은 "과거 주문진읍의 인구가 3만 5000여명에서 현재 1만 6000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도청 제2청사가 개청돼 주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주문진이 새롭게 도약하고 나아가 임시로 돼 있는 제2청사도 주문진 지역에 새롭게 신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사 개청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며 "영동지역 주민들이 멀리 춘천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에만 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글로벌본부 개청식을 24일 글로벌관과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18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인사발령장 수여식과 기념식수, 현판제막식 등을 갖는다.

홍성배

江原日報

2023 07 21 ()

02

강원자치도 과도한 용역 과감히 줄인다

용역 관리방식 전면 개편안 발표
필요성 판단 가이드라인 신설
일각서 적극 행정 위축 우려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용역 효율화를 통한 재정 다이어트에 나선다.

강원자치도는 20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용역 관리 방식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용역 수행 시 예산과 시간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타 부서 산하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학술, 행사 등의 성격에 맞춰 지표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회계감사 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모든 용역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부지사와 도지사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업무 자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 산하기관과 사회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매칭하고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에 용역 자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이번 정책은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에 이어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낀다'는 재정혁신의 제도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이달 초 용역관리방식 개선 TF를 구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 본청과 23개 산하기관에서 진행한 용역 7,75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지난 3년간 외부 용역

에 투입된 예산은 연평균 900억원 안팎이었다.

이 과정에서 용역 관리·통제 시스템 부재,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할 가이드라인 부재, 도에서 산하기관에 맡긴 위탁사업을 민간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는 '용역의 재용역'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극 행정의 위축, 행사 용역 등 관련 업계 침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용역 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용역에 맡겼던 업무를 직접 추진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쌓이면 강원자치도가 더욱 유능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07 21 ()

16

江原日報

“홍천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 지켜라”

송전탑반대대책위 요구
군의회 관련 결의문 채택

【홍천】한국전력공사의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홍천 구간 건설에 대한 지중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횡성~홍천~양평으로 이어지는 서부구간의 행정 절차와 함께 사업 대상지역 마을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위해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에 대한 초기

지중화 약속을 저버리고 산사태 위험, 산불 위험 등을 무릅쓰고 무려 440여개의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송전망이 불가피하다면 강원도에서 앞으로 건설될 송전선로는 지중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홍천군의회에서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군의회 8명의 의원은 이번 사업은 장기 국가전력망 운영 계획으로 송전선로·변전소 예정지 주변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보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을 경제성 측면이 아닌 홍천의 장기적 지역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고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천군의회는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은 건설비 등 예산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지만 안전사고 및 전자파 피해 예방 등 군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장점이 더 크다”면서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 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14

동해시 삼화사 옛터 국가 사적 지정 나선다

시, 삼화사지 지정 신청 준비

창건 시기 뒷받침 사료 출토

유적지 보호·관광 활성화 기대

동해시가삼화사지의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삼화사가위치해있던삼화동 741 일대 ‘삼화사지’에 대해 이르면 올해말 국가지정문화재(2024년부터 국가문화유산으로 변경) ‘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강원문화재연구소에의뢰해현 무릉계곡매표소북측 1만1282㎡ 면적의 원 삼화사지와 현 삼화사 중턱에 있는 중대사지 등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금당과 강당·탑지 등 건물지의 배치구조 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실시한 4차 조사결과 동쪽편에서 신라말 고려초에 삼화사가 창건된 것을 뒷받침하는 고려시대 건물지 1기와 추정 탑지·기단시설, 조선시대 건물지 8동 등 총 21기가 새로 확인됐다.

이같이 중요한 유적과 유물·유구

가 출토되자 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200만 원을 들여 강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동해 삼화사지 국가문화유산(사적) 지정 신청’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자료 조사·정리가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2024년 1월에는 강원도에 사적 신청을 한 뒤 문화재청의 현지실사 등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삼화사지가 국가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되면 유적지 보호는 물론 사지의 실제 규명을 앞당길 수 있고,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게 돼 무릉계

곡·무릉별유천지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 사찰 10호로 지정된 삼화사는 지난 1977년 쌍용C&E가 시멘트 채광을 시작하면서 사찰이 철거되고 무릉계곡 인근에 있던 중대사의 옛터에 현재의 사찰을 중창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삼화사 중대사지 등작은 사찰터까지 발굴조사를 해 유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소와 함께 제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사적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3 07 21 ()
02

춘천지법 신청사 고은리 이전 결정

속보=춘천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3년간의 표류를 끝내고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축 이전지인 '고은리 행정 복합타운'(본보 6월11일자 10면 보도)에서 새롭게 추진된다. 강원자치도가 춘천지방법원에 신청사 이전 부지로 고은리를 강하게 설득하고,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였다.

춘천지법은 대법원의 검토를 거쳐 신청사이전 부지로 '고은리 행정 복합타운'을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행정복합타운은 고은리 373번지에 약 100만㎡ 규모로 조성되며, 강원자치도 신청사 등이 건립된다.

춘천지법은 고은리 이전을 결정한 배경으로 '입지 조건, 접근성, 신속한 이전 가능성' 등을 들었다. 경사진 부지인 석사동과 달리 고은리는 평탄한 지형이어서 토목 공사 비용이 덜 드는 점이 꼽혔다. 법원 측은 "중앙고속도로 춘천IC와 인접해 외부 민원인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식으로 추진해 신속한 이전이 기대되는 만큼 2026년까지 부지 토목 공사를 마치고 신청사 건축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법검찰청은 지난해 이미 고

도 강력한 설득에 법원 화답 법조타운 3년간 표류 끝내

춘천지검 동반 이전 재추진... 잡음 없는 신속 진행 관건

은리 이전 의사를 밝힌 만큼 '동반 이전'이 다시 추진된다. 2020년 3월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가 석사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업무협약을 하고 아무런 진척 없이 무산된 지 3년4개월 만이다.

춘천지법이 고은리 이전을 결정한 배경은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직접 나서 설득한 점이 꼽힌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단독 이전 추진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고은리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강원도는 올 3월 춘천지법, 춘천지검에 고은리 이전을 제안하고, 5월에는 고은리 현장에서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부지 장점을 설명했다. 또 6월에는 김진태 지사가 직접 춘천지법을 방문해 이전을 거듭 제안했다.

대법원도 결단을 늦추지 않았다. 춘천지법원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9월 이전 결론을 내렸다.

관건은 '잡음 없는 신속한 추진'이다. 석사동 부지 이전이 지지부진하던 당시, 지역에서는 춘천지법·춘천지검 간의 '상식 싸움론' 등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검, 춘천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東亞日報

2023 07 21 ()

/ 16A

원주에 2500석 오페라하우스 들어서나

원주, 옛 종축장 부지에 건립 제안
이통장연합회 강원지부도 힘 보태

강원 원주시의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제안에 대해 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부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호 문화예술 육성 사업으로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2500석 규모의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강원도에 제안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 남부권에는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전무하다”며 “옛 종축장 부지에 대한 논란을 매듭 짓고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9일 정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강원도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면 강원 남부권뿐 아니라 인근 충북 북부권, 경기 동부권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이 될 것”이라며 “오페라하우스가 강원도의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첫 문화 융성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의 옛 종축장 부지는 6만1477㎡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이다. 1996년 문을 닫으면서 유휴지가 된 후 3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 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이 땅을 현물 출자했다가 지난해 3월 도 재산으로 반환받으려 했지만 취득세 등을 받지 않을 경우 배임의 문제가 제기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원주시의 제안은 흥미롭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종축장 부지 반환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추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 19

‘산림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제

-세계산림엑스포 앞으로 두 달, 강원산림 가치 높일 기회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산림엑스포는 고성군 세계잰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산림과 평화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와 학술,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폭우와 폭염, 가뭄과 이상기온이 거듭되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럽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이상기온을 기록했고, 같은 시기 미국은 영하 55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지구 온난화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는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세기 내에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상승을 제한할 탄소 총량 중 이미 80%가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전지구적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IPCC는 산림 등을

통해 대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이 이산화탄소 흡수와 제거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림을 통한 탄소배출저감의 필요성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은 산업화 시대에는 저개발과 저성장의 족쇄가 됐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성장동력이 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강원형 산림정책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산림엑스포를 통해 강원산림의 미래를 제시하고, 산림녹화, 산림복원, 산불방지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동시에 ‘산림과 평화’라는 이니셔티브를 위한 산림협력의 기회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전제는 국민적 관심은 물론, 세계에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온 산림엑스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강원산림의 가치를 높여 명실공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1 ()
/ 19

정당 현수막 난립, 시민 화났다

-비방성 문구에 불쾌감, 도시 이미지도 훼손

도심 곳곳에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난립합니다. 로터리마다 상대당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문구가 큰 글씨로 붙어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기보다는 '정쟁 현수막'으로 불러야 할 내용들입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들 현수막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혐오감을 느낍니다. 도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방해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민 우려가 큼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 신고도 필요 없이,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정 게시대에만 붙일 수 있게 제한하는 반면, 정치 현수막은 아무 장소에 걸 수 있게 해볼 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SNS 등 수많은 매체가 있는데도, 굳이 현수막으로 정치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수막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석달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민원이 1만 4200여건 접수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과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12월 11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석달 동안 98건이 접수돼, 개정법 시행 전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춘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현수막 민원이 개정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 302건에서 921건으로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전국 자치단체도 정당 현수막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각 시도에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공동결의문 발표' 동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동결의문 추진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채택된 공동결의문을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상대정당을 비방하거나 정치인 공치사가 대부분인 현재 정당 현수막은, 정치 거부감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역행하는 현수막 정치는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21 ()
/ 25

집값 하락 우려 산사태 취약지 정보 공유 안 하다니

마을 단위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강원지역에 2,933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지만 정작 해당 마을 주민들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1차 전문가 조사와 2차 시·군 조사를 거쳐 매년 지정되며 그 결과는 ‘산주’에게 통보된다. 문제는 시·군 홈페이지에 지번이 고시될 뿐 마을 이장 등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을 단위 재난대응 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사태 위험지역이 공개됐을 경우 집값 하락 등 재산 피해를 항의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명 피해 우려보다 부동산 가치 하락에 비중을 두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문제로 다루기에 앞서 재난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재난대응 체계의 허술한 면이 고루 드러난 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형식적인 발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즉,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산사태 취약지역별 대피소(마을회관, 학교 등)를 확인하면 해당 마을이 취약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에게는 ‘깜깜이 운영’일 뿐이다.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의 경우 ‘사곡리 마을회관’이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치단체 재난대응 체계가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도 힘들다.

도내 2,933곳 ... 주민들 지정 사실조차 몰라
매년 1, 2차 조사해 산주들에게만 통보
기후변화 대비 재난대응 체계 전면 보완해야

재난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일차적으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그래야 대처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관리 담당자의 역할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현장의 상황이 올바르게 파악되고 정보가 공유된 상태라야 재난대응 매뉴얼이 원활하게 가동되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무조건 준수돼야 하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재난 상황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발생하거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폭우로 야기된 마을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구멍을 찾아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다.

江原日報

2023 07 21 ()

/ 25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경계심 이완 땀 더 큰 화 불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도내에서도 이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의 발생 동향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간 코로나19 신규 일평균 확진자는 방역조치 해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2만6,708명을 기록했다. 평균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1.9명으로 올 3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도내에서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67명으로 한달 전 360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 이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조치 해제와 함께 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다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시기적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철이다 보니 마스크를 쓰던 사람들도 서서히 벗고 있는 추세다. 공공장소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현격하게 줄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매일 확인하던 확진자 수도 관심 밖이 됐다. 그런데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낮아진 만큼 어느 정도 확진자 수 증감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부담이 될 수 있다.

방역 책임이 오롯이 개개인에게 맡겨진 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되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교통기관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진행형이다. '불안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심마저 풀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준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 당국에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더운 날씨와 장마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